

여권 '문재인 법무 카드' 갈등 2라운드

당-청 전면전... 결별의 길 가나

“이제는 전쟁이다” 김병준 부총리 사퇴에 이어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인선 문제를 놓고 당-청 관계가 심상치 않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지난 2일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 불가론을 펼친 데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고 정면 성토했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무장관 인선 문제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각자의 길을 가지 않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른 노 대통령의 탈당과 조기 정계개편론도 부상하고 있다.

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인선 반대 입장에 대해 “코드가 맞아야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는게 아니냐”며 “인품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자격이 있느냐. 오히려 국정운영 마무리 차원에서 판단해줘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이같은 이병완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김병준 부총리 사의 표명 이후 오전 11시부터 노 대통령은 이병완 실장 등 비서진과 점심시간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한 청와대 비서진들은 김병준 부총

금의장 불가 입장... 이비서실장 반격 盧대통령 탈당·조기 정계개편론 부상

리의 사퇴가 '여론 재판'에 의해 이뤄졌다며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대해 맹성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측은 김근태 의장이 2일 저녁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법무장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심각한 인사권 침해가 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와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실제로 펼쳐지면, 앞으로 당청 정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김 부총리에 이어 또다시 문 전수석의 입각을 강행할 경우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고, 이는 여권의 위기극복 노력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청와대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근태 의장의 입장에서라도 여기서 밀려나간 정치적인 타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물러서기 힘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주택 거래세 얼마나 줄어드나

운암동 25평 570만원→265만원 양산동 49평 1천만원→500만원

정부가 열린우리당이 오는 9월부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거래세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데 따라 실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2%로 동일해졌다.

거래세 인하조치는 이달 임시국회(8월 21~26일)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9월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B아파트의 경우, 25평형의 분양가가 1억3천여만원으로 입주자가 분양받을 시 기존 지방세법에 따르면 거래세를 4.4% 적용해 570만원 정도를 내야 했지만 9월부터는 이에 절반인 26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북구 동림동 T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490만원에서 500만원선으로, 29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1억4천500만원으로 예전 같으면 638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319만

원만 내면 된다.

북구 양산동 H아파트는 34평형~59평형대로서 평당 분양가가 460만원에서 490만원선으로, 34평형 짜리 아파트의 분양가는 약 1억5천700만원이다. 기존 지방세법에 따르면 690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9월부터는 345만원 정도면 된다.

양산동 G아파트 49평형 선호층의 경우 총 분양가가 2억3천500여만원으로 거래세를 4.4% 적용할 경우 1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살 경우 총 분양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가구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면서 “광주지역에 미분양이 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아파트 거래에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이효선 광명시장 사퇴하라”

호남향우회 한나라 탈당 불구 궤기대회 등 강력 대응키로

‘호남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효선 광명시장의 한나라당 탈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호남향우회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호남향우회원들은 이 시장이 ‘전라도 X’ 발언 이후에도 영암군과 자매결연을 일방파기하고 광명시의회도 고흥군의회와 결연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궤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는 3일 회의를 갖고 전국 각 지역 호남향우회와 연대해 오는 17일 광명시장 앞에서 이 시장의 행태를 규탄하고 시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궤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홍건섭 사무총장은 “최근 일련의 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며 “궤기대회에는 5천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이 시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 고흥군향우회 송재만 회장이 “의회 차원에서도 고흥군의회와 결연 중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



이효선 광명시장이 3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탈당의사를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명시 호남향우회 이철호 회장은 “광명시장 사퇴 서명 운동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 호남향우회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영암군과 자매결연 일방 파기와 관련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은 3일 “조만간 영암군을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당-청 협력위해 黨인사 입각해야”

우리당, 임내현씨 법무장관 추천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르면 내주께 단행될 예정인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앞두고 당내 인사가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고한 당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당내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와 관련, 김근태 의장은 최근 공석인 법무장관 후보로 현재 당 법률구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한 당의 우려감을 전달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것.

또한 당내에선 김병준 부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한 교육장관 후보로 이미경 김명자 홍창선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김진표 전 교육장관이 입각할 당시

에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법무장관과 교육부장관 인사의 경우 천정배(千正培) 김진표 의원의 당 복귀에 따른 후속 인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내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취임 2년을 맞은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자는 주장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엔 장영달 유재건 김성근 김명자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의 이름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 인사입각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당청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호락호락 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포기하고 당이 가져다주는 게겠느냐”고 반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부총리 사표 곧 수리

이번주내 개각 원칙 결정

청와대는 천정배 법무장관 사퇴에 이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에 따라 금명간 이들 부처에 대한 개각 시기를 정하고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곧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후속 개각 문제와 관련, “현재 교육부총리의 경우 후임자를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이번주 안에 개각의 원칙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장관 후보군으로는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과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4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총리 인선의 경우, 김 부총리의 사표수리가 이뤄지는 시점에 후임 인선 논의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교육계에서는 우리당 이미경 의원, 신인영 전 이화여대 총장, 설동근 현 대통령 저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태리가구 전문점

홍 스키이스.kr

www.hongskies.kr

동구 정동로터리 (파출소-편의점) 2층 스키이스 가구전문점 02-222-7118~7

스포츠 아슬릿
다이나믹명품관 100459

템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70% 에너지 절감

에너지효율 1등급 에어컨, 난방기 등 7대
냉방시 에너지 70% 이상 절감

조일환 부주 조일환 부주 시장

02-222-7118
080-775-7117

에너지효율 1등급 템피아
02-222-7118
080-775-7117